

大學教育과 教育課程의 改善

姜 信 雄
(弘益大 教育學科)

大學教育이 量的 膨脹과 質的 低下라는 불명으로부터 逸脫할 수 있기 위해서는 政策的 硬直性과 劃一性을 과감히 불식하고 多元的 融通性과 차원 높은 開放性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I. 序 言

대학의 存立과 運營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커다란 原理 아래 성취된다. 즉 大學은 어떠한 目的을 위하여 설립되느냐 하는 理念的 側面과 大學教育은 어떠한 內容으로 選擇되고 組織되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後者인 教育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教育課程’이라 불리어지는 교육내용의 선택과 운영에 관하여는 많은 관련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大學教育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느냐라는 문제 이외에도 그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선정되고 조직되어야 하느냐와, 어떤 사람이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느냐? 선정된 교육내용을 어떻게 하던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가르치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

이냐?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評價할 것이냐? 잘못된 教育課程의 운영은 누가 어떤 입장에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냐?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質問에 관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學問의 分類上으로는 教育課程의 문제와 教授方法論의 분야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위의 두 가지는 同一體系 속에 相互補完的인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들 중 어느 하나를 떼어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도 교육과정의 넓은 개념 속에 교수 방법론이 包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하되 논의의 한계를 위하여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정의 역사와 동향을 살펴본 후에 이에 관한 理論的 示唆點을 찾고 나아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향차의 改善方向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現代社會와 大學教育의 機能

基本的으로 大學은 學問의 能力과 指導의 資質을 具備한 全人의 成長을 그 目的으로 하는 것이며, 學生들의 知的, 身體的, 社會的, 精神的, 道德的인 諸側面의 調和的인 발달을 도와 주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다.

교육법에 규정된 大學教育의 目標은 매우 抽象的인 것 하지만 그 근본정신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學問의 심오한 이론, 그 광범하고 정제된 응용방법 및 지트적 인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탓으로 한낱 미사여구의 조항으로 '陣列'만 되어 왔다.

해방 이후 大學의 亂立으로 이 조항의 정신은 더욱 그 眞價를 잃어 버리고 日帝時의 大學과 科學교과 미국식의 4년제 大學과 혼동되어 대학교육의 目的은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도 많은 대학들이 學生增募의 수단으로 새로운 學科들을 준비도 없이 신설하게 되어, '量的 膨脹과 質的 低下'라는,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멀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현대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專門的의 分化가 필수적 조건으로 갖추어져야 함은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知識의 增加와 급속한 변화는 '專門'의 성질을 크게 변모시키고 있다.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단 1년만에 출판되는 學科지가 10萬種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 科學과들을 斷片的으로 분할만 해 놓는다면 同一分野內에서도 새로운 발견을 따라가기가 힘들게 된다. 예컨대, 10년 전만 하더라도 X線結晶學은 고체들만을 그 범위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화학·생물학·역사학적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분야로 확대되어 수학, 생물학, 화학 및 야금학 등에 관한 기초 知識이 없이는 '專門化'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즉 知識의 팽창으로 전문분야의 수자는 증가했으나 분야의 넓이는 종전보다 확대되어 他分野와 관련을 맺지 않고서는 专业化가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專門교육 자체도 지나친 特殊化에서 벗어나 一般化되어 가고 있는 傾向에 있다. 이 때

문에 外國에서는 4년간의 大學과정을 통하여 完結된 專門교육을 실시하려는 방침을 바꾸어 大學外機關에서의 專門적 訓練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科學과 技術의 급격한 발달은 知識의 성격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包括的인 原理와 理論의 探索, 그리고 探究的 態度와 能力을 요청하고 있다. 大學은 인류의 위대한 知的 遺産을 繼承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본래의 사명을 확고히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의 단순한 傳授는 대학교육 자체의 否定을 뜻한다. 大學은 기존 知識을 一般的 原理에 의하여 '統合' 하여야 하며 새로운 知識을 향한 合理的 熱情(Passion for Rationality)과 더불어 그 探究精神(Mind in Inquiry)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 學生들이 배우는 知識은 그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構造와 知識을 생산해 낼 줄 아는 方法(Structure of Knowledge and Cognition)을 터득하는 데 결정적인 關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般教養課程은 專攻課程을 위한 부속물이 아니라 人間發達과 知性人의 資質을 갖 추기 위한 本質的 要素인 것이다. 교양교육을 통하여 高度의 思考能力과 探究力 그리고 獨創的인 研究態度를 길러야 하며, 이 태도가 형성되어야만 專攻領域의 學習이 비로소 可能함을 認識해야 한다.

III. 우리나라 大學教育課程의 來歷

민족해방 이전의 것을 論外로 한다면 解放後의 우리나라 高等教育은 주로 美國의 制度를 모방·실시하는 것으로 그 출발을 삼았다. 大學의 사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로 구성되며, 그 하나는 學術의 심오한 理論과 그 應用方法을 교수·연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指導의 人格을 도야하는 일로부터 비롯된다. 이같이 교육법 規章에 나타난 大學教育의 目的은 植民地 設校부 分을 제외한다면 日帝時代의 대학교육 目的과 對면상 對等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美國의 4년제 大學과 日帝治下의 舊制大學과의 사이에서 의미 없는 混同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規章上으로는

4년제 대학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一般敎養科目이 신설되고 專攻科目과 選擇科目을 두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4년제 대학에서 일반 교양교육을 배려한 것은 본격적인 전문교육을 대학원에 진급해서 실시한다는 前提 아래였기 때문이나, 이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舊制大學에서와 마찬가지로 細分化된 專門敎育을 실시하려는 경향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또한 人口增加에 발 맞추어 각종의 國·公·私立大學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들 대학들은 많은 學科들을 신설하여 대학 교육내용의 무리한 特殊化와 “斷片化”를 가져오게 되어 이제 우리나라의 大學은 구제 전문학교 이상으로 內容上의 亂脈相을 가져오고 말았다. 대학의 학과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교양과목은 차차 輕視되고, 많은 대학들의 경우에 교양과목 가운데 일부를 아예 課程에서 除去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일부 대학의 人文·社會系 學生들은 ‘自然科學概論’을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대학들이 몇 개 학년이나 학과를 합반해서 무리한 강좌운영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양교육이 輕視되고 있는 좋은 證據로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대개 외부 강사가 아니면 신입 초년교수라는 사실인데, 이것은 대학교육의 장래를 위하여 시급히 고쳐되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문교당국은 1952년 대학 교육과정의 정비에 착수하여 우선 大學의 敎科를 必須와 選擇으로 나누고 필수과목은 이를 다시 一般敎養科目과 專攻科目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일반 교양과목에 관해서는 인문과학계, 사회과학계 및 자연과학계로 나누어 많은 學科들을 設定하고 각 분야별로 3과목 이상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각 대학의 실정으로는 인문·사회과학계 학과에서는 자연 과학계의 교양과목을 3과목 이상 부과할 수 없었으므로 불가피하게 교육법시행령 제 125조를 개정하여 각 대학이 공통으로 과하고 있는 국어, 외국어, 문화사, 자연과학개론 및 체육에다 철학개론을 첨가하여 이 6개 과목을 모든 대학에 다같이 課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과목 이외에 인문, 사회, 자연의

각 계열에서 1과목 이상씩을 적의 선택하도록 하되, 전공과목에 속하는 과목은 일반 교양과목으로 과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學點制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당초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80 학점으로 규정하여 실시해 왔으나 大學이 점차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서부터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자는 着想에서 일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160 학점으로 이를 引下하고 대학기당 취득학점은 24 학점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다가 다시 몇몇 외국의 경우를 참작하여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실험대학 운영의 기본정신이라는 근거에서 다시 140학점으로 인하 조정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학 예컨대 의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 등은 자체의 전공 필수과목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150 내지는 160 학점을 이수하도록 과정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IV. 우리나라 大學敎育課程의 現況

政府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자는 의도에서 大學敎育의 改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71년도에는 서울大學校의 改革案을 필두로 각 대학에서 제출한 개혁안이 만들어졌고, 문교부도 '72년을 高等敎育改革을 위한 研究의 해로 설정하고 教育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大學敎育改革事業’이란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政策研究, 實驗大學의 운영, 그리고 대학 特性化의 세 가지이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改革事業은 周知된 바와 같이 實驗大學을 先頭로 하는 개혁안이었다. 실험대학 운영을 위한 教育법 중 개정령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및 사범대학에서 3년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課程을 早期 이수한 者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에 달하기 전에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없었던 季節學期를 設置·運營함으로써 이를 수강할 수 있는 者는 성적이 특히 優秀하거나 復學, 再修, 또는 기타 事由로 受講이 필요하다고 學則이 인정하는 者에 한한다.

세째, 일반 교양과목의 배정을 전체 과목의

30% 이내로 하며, 人文科學, 社會科學, 自然科學의 各系列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 課하되, 國民倫理, 韓國史, 敎練 및 體育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네째, 履修單位의 경우 이를 學點으로 하고, 학점은 1 학기 동안 16 시간 이상의 강의물 1 학점으로 하되 實驗, 實習, 實技, 體育과 敎練 기타 학칙에서 정하는 과목은 1 학기 32 시간 이상의 강의물 1 學點으로 한다.

다섯째, 특히 성적이 優秀한 者에 대하여는 매학기 最大取得學點 외에 3 학점의 범위내에서 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끝으로 대학에서 제학중 전공할 수 있는 學科는 2개 학과 이내로 하되, 전공하는 學科 이외의 학과의 과목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그 학과를 副專攻으로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것 등이다.

결국 실험대학 운영의 취지는 系列別 募集, 副專攻의 擴大, 能力別卒業制, 그리고 季節制授業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理論과 實際와의 사이는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葛藤을 일으키고 있거니와 이 대학교육개혁사업은 현시점에 와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V. 問題의 把握

지난 10여 년간 대학교육개혁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해 온 實驗大學運營은 또 하나의 失敗로 終結을 지었다. 實驗大學의 출발 '아이디어' 자체가 나쁜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 왜냐하면 기본 취지는 일제시대의 殘滓를 없애고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高級頭腦를 생산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학을 선진 歐美大學의 水準으로 끌어올려 보코자 시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실험대학 운영이 실패한 것은 政府가 당초 이 같은 政策을 마련해 해마다 擴大해 오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 놓아야 할 敎授確保, 施設擴充 등의 先行條件을 등한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80년대의 대폭적인 定員增加와 卒業定員制 실시는 실험대학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실험대학 운영을 채택하면서 정부는 그 先行條

件으로 교수 확보와 시설 확충 이외에도 敎授의 講義時數 減縮, 圖書館施設 擴充, 定期的인 課題物 賦課, 敎授方法 및 評價制度 改善을 갖추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교수요원 확보가 미진하여 수업부담의 감축은 고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시간강사 등의 依存度가 높아지며 도서관 시설도 크게 부족하여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大單位講義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討論式授業은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평가제도의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改革事業에 협조외무를 지닌 대학당국은 불필요한 업무량의 폭주와 함께 人力과 豫算의 浪費 등 큰 어려움을 치르고 말았다.

系列別 募集制度가 실시되자 大學 2학년 진급시에 學科選擇과 配定過程에서 混亂이 따르고 人氣學科 偏重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으나, 7·30 교육개혁 이후 入試制度가 크게 바뀐 뒤 募集單位의 細分化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82학년도 入試에서는 學科別 募集이 크게 늘어나고 '83학년도에는 전국 99개 대학 중 系列別로만 모집하는 대학은 全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科別 募集에로의 완전한 復歸가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副專攻制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기업체 등에서 신입사원 채용시 이를 認定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外面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80년도까지는 副專攻을 義務化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勸獎事項으로 바꾸었다. 한편 複數專攻制도 몇몇 대학에서 실시하고는 있으나 극소수의 학생만이 이를 채택하며, 대학을 5~6년 동안이나 다녀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보편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대학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40 학점으로 감축한 채로 시행하고 있어서 實驗大學의 다른 特性은 모두 白紙化 또는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유독 學點減縮만이 그대로 保留되고 있는데 이는 곧 大學教育의 質의 低下와 敎授採用에 따른 경미 절감의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극심한 교수요원의 不足과 교수채용 기피경향 때문에 이 학점 감축안은 당분간 계속될 可能性이 농후하다. 종전의 160 학점을 140 학점으로 감축한 결과 與件의 具備가 충족되지 않

는 가운데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배정문제에 다른 混亂과 葛藤이 심해졌으며 制限된 시간표속에서 어느 것이 優先順位냐에 대한 鬭爭이 치열해진 것도 대학교육 본래의 사명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불행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未完成'의 反復이다. 하나의 政策이나 制度가 수립되면 이에 다른 後續措置와 補完策이 따르면서 이를 어느 정도 軌道에 올려 놓을 때까지 推進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제도와 정책이 바뀌곤 한다. 外面的 形式만이 변모될 뿐 內容的 着想이 매우 부족하다. 오히려 중요한 일은 '內容을 어떻게 運營하느냐?'에 있는 것이며, 내용의 운영이란 단순히 '方法論의 次元'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Ⅶ. 改善의 方向

大學教育의 使命은 심오한 學問探究와 指導의 人格을 배양하는 데 있다. 形式的인 知識內容을 注入하거나 制度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感情에 호소하는 類의 것이 아니라, 理性的 判斷能力을 존중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亂舞하고 있는 價値規範 가운데서 選擇하고 批判하며, 合理的으로 正當化할 수 있는 教授方法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自發的인 對話와 發表를 통하여 自律性을 신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知性人이 가질 수 있는 長點은 懷疑(scepticism)로부터 출발하여 '理性'을 지닌 合理性(rationality)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開放性'이 요청된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結論 내리기에 성급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더우기 權威에 입각한 思考의 談合에 급급하다. 교수가 설명하거나 冊字에 담겨져 있는 知識은 학생에게는 아무런 意味가 없다. 疑問과 反論이 일어서 論議의 對象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開放되어 있어야 한다. 學生 자신이 意思를 표현함으로써 歪曲된 스스로의 觀點을 修正할 수 있는 교수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은 實踐의 意志를 담은 '信念體系'를 형성하게 해줄 것이다. 結果로서의 知識이나 結論보다는 끝없는 '過程'을 거침으로써만이 신념 체계가 自我 속에 內面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未來指向의 高等教育의 教育課程 改善을 위하여 몇 가지 方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學의 教育課程은 그 教育目標과의 '一貫性'을 확보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細分만 되어 있고 向次의 指導者像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實效를 거둘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이를 위하여 일반 교양과목을 강화하고 그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와 대학당국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교육의 自律性을 살려 나가기 위하여, 課程 편성과 그 運營에 '多元的 融通性'을 加味하여야 한다. 교육의 制度, 內容 및 方法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 분야에 따라 신축성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일률적인 행정조치는 기본 목표로부터의 乖離와 함께 내용상의 葛藤을 가져와 統合性을 외면한 跋行的 展開만을 거듭할 뿐이다.

셋째, 教育課程의 '適合性' 내지는 聯關性에 관한 철저한 檢討를 해야 한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비율을 재검토하는 문제가 합리적인 근거하에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양과목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양과정을 강화 내지는 深化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윤리과목 등이 여하히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를 속히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된다.

네째, 現行制度에 變化가 없는 한 卒業에 필요한 學點을 다시 160 학점으로 上向調整하고 講義時間의 單位를 필요에 따라 組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教授方法論의 개선을 위하여 교수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교수 스스로가 방법론 발전을 탐색해 가도록 '變形'의 自由를 인정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勸獎하는 發展指向의 自律性을 발휘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끝으로, 大學教育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그 '內的 效率性'과 '外的 生産性'을 함께 調和的으로 달성할 수 있는 方法을 構想·實施하여야 한다. 社會人은 대학교육에 否定的이며, 政策은 孤立되는 극심한 自家撞着을 조속히 탈피하여야 하며, 劃一的인 模型을 강요받지 않는 次元 높은 '開放性'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건이 구비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教育浪漫主義는 意味 있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